

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자료

- 일시 : 2026년 5월 4일(월) 15:30
- 장소 : 정부서울청사 2층 회의실
- 참석자
 - 안은미 상임공동대표 대리 참석(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)
 - 고선순 상임공동대표(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)
 - 김건태 상임공동대표(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)
 - 김용익 상임공동대표(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)
 - 임지준 집행위원장(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)
 - 김동호 정책위원장(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)
 - 김현정 집행위원(한국사회복지연대 사무총장)
 - 조경애 집행위원(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사무처장)

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

통합돌봄 재정 확대를 통한 전국민 돌봄권 보장 및 돌봄노동자 보호 처우 개선

안 은 미
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

1. 현황 및 문제점

- 시범사업 대비 부족한 통합돌봄 재정·인력 지원
 - 일부 시범사업 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대상자 축소 위기
 - 전담 인력 부족 등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안정적 정착 불가능한 수준
- 통합돌봄 내 돌봄노동자 보호 방안 미비
 - 돌봄노동자는 돌봄 전달체계 최일선에서 활동해 돌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.
 - 통합돌봄에서 재가서비스 요구가 폭증하며 돌봄노동자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.
 - 그러나 통합돌봄 관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혹은 보호 방안은 전무함
- 통합돌봄 거버넌스 내 돌봄노동자 제외
 - 돌봄노동자가 현장 이해도가 가장 높으나, 통합지원협의체에서 배제
 - 돌봄노동자 당사자의 노동환경, 처우개선 논의 창구 부재

2. 요구 사항

- 통합돌봄 관련 재정 및 인력의 획기적 확대
 - 관련 재정 및 인력 확대로 통합돌봄 사업추진 정상화 및 전국민 돌봄권 보장
 - 확대된 재정이 돌봄노동자 보상으로 이어지는 체계 마련
- 통합돌봄 관련 돌봄노동자 보호 방안 및 처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
 -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가 지역·기관·고용 형태에 따른 처우 격차를 완화하도록, 기본적 처우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
 - 통합돌봄 법령 혹은 지자체별 조례에 돌봄노동자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의무화
- 통합지원협의체 내 돌봄노동자 참여 보장
 - 통합지원협의체 내 돌봄 노동을 대표하는 자(혹은 노동조합) 참여 보장
 - 통합지원협의체 심의·자문 사항에 돌봄노동자 보호방안 포함

장애인(당사자)

고 선 순
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

1. 기본 인식

-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복지체계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
- 장애계는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행 우려 병존

2. 주요 건의사항

- 초기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
 - 사업비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기반 구축 병행 필요
 - 지역 내 돌봄 연계·조정 기능 강화 필수
 - 전담 인력 확보·기관 간 연계·협력체계 구축 필요
- 장애인 돌봄 특성 반영
 - 일상지원 중심이 아닌 통합적 서비스 구조 필요
 - 건강관리, 재활, 활동지원 등 연계 제공
 - 개별 사업 확대 방식 지양
 - 지역 단위 통합·조정 체계 구축 필요
- 제도 초기 설계의 중요성
 - 초기 인프라 부족 시 기존 사업 단순 나열 수준으로 운영 우려,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확대 가능성
 - 부담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에게 전가될 가능성 우려
-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고려사항
 - 장애인 배제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 필요
 - 정책 수립·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의견 반영 강화

3. 향후 협력 방향

- 통합돌봄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 필요
-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협력 예정

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

김 건 태
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

1. 현황과 문제점

-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운영
 - 노인, 장애인 등 특정 대상군 집중, 의료·요양·복지 서비스가 파편화 되어 있어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미비
- 한정적 재정지원으로 인한 현장 체감도 저하
 - 통합돌봄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지원의 한계 발생 및 민간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미지원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, 서비스 질 저하 우려
- 돌봄 사각지대의 지속 발생
 - 의료·요양 중심의 현행 체계로는 가족돌봄청년(영케어러), 고립 은둔 청년, 위기 아동 등 새로운 형태의 돌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 발생

2. 정책 제안

- 민간 사회복지계 전문 인력 지원 및 처우 개선
 - 통합돌봄 사례관리,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민간 사회복지 인력 확충, 별도 인건비 등 예산 지원
 - 공공, 민간 협동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강화
- 전국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대상자 확대
 - 기존 노인·장애인 중심의 돌봄체계에서 나아가 정신질환자, 아동·청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된 '전국민 통합돌봄 체계'로의 전환 필요
-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및 지원
 - 공공 및 민간에서 충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및 지원 필요

사회연대경제

임 종 한
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위원회 위원장

1.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제시한 목표는 최소한의 출발선

-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2,623억 원,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비 3,824억 원, 합계 6,447억 원의 예산 반영 필요
- “전국 시행”이라는 말이 실제 서비스와 인력, 시설과 주거, 지역 인프라로 이어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

2. 지방정부가 통합돌봄을 지역의 필요에 맞게 돌봄 재정의 자율성 부여

- 포괄보조 방식으로 재정 구조를 전환하고, 담배 제세부담금,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, 지방소멸대응기금, 부동산 관련 세원, 고향사랑기부금 등 기존 재원을 돌봄에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로 개선

3. 통합돌봄 전문 인력의 추가 배치 필요

- 읍면동에 사례관리가 가능하려면 케어매니저, 사회복지사, 간호사 등 최소 3인이 배치되어야 함
- 읍면동에 인구가 2만 이상인 곳은 3인이 배치되어도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, 민간에서 마을 기반으로 돌봄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,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을 육성하고 민관협력 구조가 정착되어야 함
- 돌봄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법, 건강보험법 등이 개정 정리되어야 함

시민사회

김 용 익
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

1. 현황 및 문제 인식

- 통합돌봄 시행됐지만, 재정 부족으로 현장 실행 어려움
- 지역 격차 해소·인력 확보 모두 한계 상황 직면 예측

2. 2027년 예산 반영 요구 (총 6,447억 원)

- 통합돌봄 사업비: 2,623억 원 반영
- 돌봄 인프라 구축비
 - 서비스만으로 한계, 인프라·전달체계 구축 병행 필수
 - 총 1조 9,121억 원 규모 5개년 인프라 투자 계획 마련
 - 2027년 1차 연도 예산 3,824억 원 반영
- 사업비+인프라 포함, 2027년 총 6,447억 원 확보

3. 재정 구조 개편

- 지방정부가 지역 필요에 맞게 활용하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
- 돌봄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원 구조 마련

4. 정책적 요청

- 재정 결정이 통합돌봄 성패 좌우. 책임 있는 재정 확대 및 구조 개편